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일시 2019년 6월12일(수) 10:00

장소 상장회사 회관 대강당(지하1층)

주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후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 행사개요

- 일 시: 2019. 6. 12. 10:00~12:20
- 장 소: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B1)
- 공동주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후 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Session 1. 개 회			
10:00 ~ 10:30 (30분)	개 회 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축 사	○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추경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10:30 ~ 10:35 (5분)		기념촬영	
Session 2. 주제발표			
10:35 ~ 11:00 (25분)	발 제	○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11:00 ~ 11:10 (10분)		장내정리 및 휴식	
Session 3. 종합토론			
11:10 ~ 12:10 (60분)	토 론	○ 좌 장 : 이동기 교수 (서울대) ○ 패 널 - 오문성 교수 (한양여대/조세정책학회) - 신상철 수석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 박 훈 재정세제위원장 (경실련) - 김용민 대표 (진금융조세연구원)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김치환 대표이사 (주)삼기오토모티브	
		객석 토론 및 총정리	
12:10 ~	폐 회		

목 차

■ 발제문

기업승계 원활화를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1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 토론문

- 오문성 교수(한양여대/조세정책학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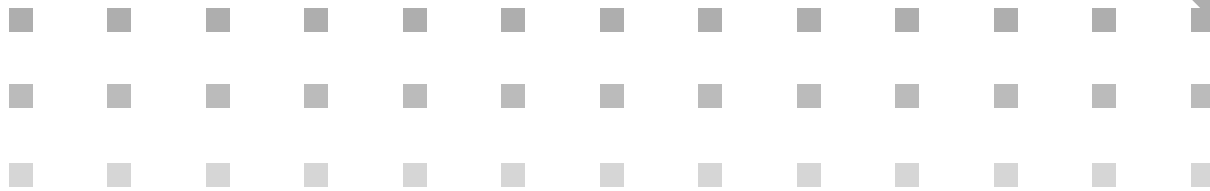
-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25

- 박 훈 재정세제위원장(경실련) 35

- 김용민 대표(진금융조세연구원) 43

-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53

- 김치환 대표이사(주)삼기오토모티브)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발제문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2019. 06. 12.



Contents

1. 기업승계, 왜 중요한가?
2.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5.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1. 기업승계, 왜 중요한가?

- ☑ 기업의 연속성 유지, 암묵지 및 기술의 계승 → 기업 경쟁력 향상
- ☑ 양질의 일자리 보존, 고용 창출, 투자 확대 → 경제 활력 제고
- ☑ 명문장수기업 탄생을 촉진하고 건실한 중소·중견기업 층을 두텁게 함
 - 이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 청년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현상 완화에도 기여
- ☑ 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짐
 -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경영비법, 생산설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산도 死藏
- ☑ 경쟁국들은 기업승계를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중시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극화

3



2.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기업의 승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인가?

- ☑ '기업 재산'의 상속 및 이전과 일반 재산의 상속 및 이전의 차이
 - 생산활동에 기여되는 기업재산 :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
- ☑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 '제2의 창업'

기업승계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 ☑ 국민경제 : 양질의 일자리 유지, 고용창출, 투자 확대, 재정수입 증대, 기술 축적과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
- ☑ 기업 : 경영성과 향상, 누적우위(cumulated advantage) 창출, 명문 장수기업으로 가는 관문, 기업소유 가족 번영
- ☑ 근로자 : 일자리 보존, 복지 향상, 직업의 안정성 증대

4



2. 기업승계 대한 인식

EU 중소기업법의 기업승계 관련 규정

“ 성공적인 사업의 승계 및 양도는
 신규 창업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보존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기업의 승계 및 양도에 대하여는
 창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조세 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승계 및 양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The Small Business Act.)

5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감면의 정당성>

- ☞ '기업승계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고 일자리 보존이라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조항들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2014.12.17.)의 주요 내용 -

“ ... 승계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지대한 차별취급을 초래하지만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공복리를 통해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감면의 개별적인 수단들은 부분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상속인이 높은 상속세 납부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대기업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투자여력을 상실하거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체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성이 초래하게 될 공공복리의 훼손 부담은 크기 때문에, 대기업에게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이 아무런 세감면 혜택 필요성 심사도 거치지 않고 대기업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제공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 사업재산의 50%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관리자산에 대해서 상속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다. .”

6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감면과 재정 수입>

- ☑ 상속세 등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결과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로 연결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소분을 상회하는 재정 수입 효과를 가져 온다. (전문가 + 다수의 연구결과들)
- ☑ 현행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받은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과세 이연 또는 이월 과세)
 - 추후 상속인(후계자)이 상속 받은 기업의 주식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양도 및 매각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당해 주식 및 재산 취득한 금액(후계자가 기업을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님)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징수함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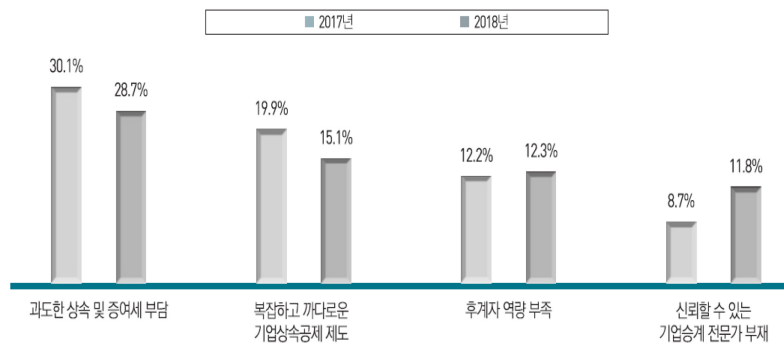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과다한 상속세 : 기업승계의 최대 걸림돌

- ☑ 기업승계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는 소유권 이전에 수반되는 '과다한 상속·증여세 부담' 그 다음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제도', '후계자 역량 부족'

중견기업의 승계 관련 애로 (단위 : %)



자료 : 2018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중견기업연합회

8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현황

■ 상속세율 : OECD 국가 최고 수준

- ☑ 상속세 최고세율 50% + 최대주주 보유주식(경영권)에 대한 할증 평가(30%) ⇒ 최대 65%
- ☑ 실효세율(납부세액/과세표준)도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
 - 상속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2017년 기준) : 한국 28.09%, 일본 12.95%, 독일 21.58%, 미국 23.86%
 - *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 : 100억 초과~500억 이하 45.6%, 500억 초과 47.6%

9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현황

■ 가업상속공제 제도

- ☑ 성격 : 과세 이연(이월 과세) 방식(2014. 1. 1. 이후 상속분) ⇒ 상속 재산 양도 및 처분 시 상당부분 양도세로 징수
- ☑ 공제 대상 및 요건
 - 공제대상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 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
 - 사전 요건 :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 ☑ 공제 한도 : 최대 500억 (가업의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10년 이상) 300억(20년 이상), 500억 (30년 이상)
 - 적용대상 상속재산 :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주식,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사업무관자산은 제외)
 - * 상속재산가액 공제 (상속세액 공제 아님)
- ☑ 사후관리 요건 (관리기간 : 상속 개시일 이후 10년)
 -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해당 상속인의 가업 유지
 - 주식 등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처분 및 양도 금지
 - 정규직 근로자 100%(중견기업 120%)이상 유지, 주된 업종 유지 등

10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현황

■ 기업승계 증여세과세 특례

- ☑ 가업영위 기간 10년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년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이 100억 원 이내에서 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일반 누진세율(10~50%)이 아닌 10% 또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납부
- ☑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기한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 징수
- ☑ 사후관리 요건 (관리 기간 7년)

11



3. 기업승계 관련 현행 상속세제

승계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와 상속세 부과

- ☑ 기업을 승계하는 시점은 다양한 어려움이 동시 다발적으로 가중되는 시기
 - 리더십 교체에 따른 기업 조직 및 인력 관리상 문제
 - 가족 갈등 및 분쟁 가능성
 - 승계와 관련한 법률 및 세무 문제에 대한 대응
 - 승계 준비 과정에서 미루어 놓은 투자 실행을 위한 자금 수요 증가 등
- ☑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고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과연 얼마나 될까?

* 편법승계 논란

12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상속 및 증여 세율 우대 적용

- ☑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한 기업의 상속·증여 : 최고세율 30% (다른 과세등급의 최고세율은 43% 또는 50%)
- 후손에게 기업을 승계함으로써 가문의 유산을 창조하고 경쟁력 있는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과세 표준액 (단위 : 유로)	과세등급별 세율 (단위 : %)			
	상속인 그룹 I (배우자+직계비속)	그룹 II		그룹 III
		과거 (~2009)	현재 (2010~)	
- 75,000	7	30	15	30
- 300,000	11		20	
- 600,000	15		25	
- 6백만	19		30	
- 13백만	23	50	35	50
- 26백만	27		40	
26백만 초과 (350억 원)	30		43	

13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 ☑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요건에 부합하면 동일한 감면혜택 부여

1) "사전 특별공제" : 사업재산의 최고 30%까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인적 요소가 강한 가족중심 기업으로서 회사 설립계약이나 정관에
- 이익배당 및 자금인출 제한
- 재산처분 제한
- 퇴직보상금 제한 등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상속 사업재산 중에서 최고 30%에 달하는 금액을 '사전 특별공제' 형식으로 상속세 부과에서 제외"

(개정 상속세법 제13a조 제9항)

14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2)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

- ☑ '사전 특별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재산 가운데 26백만 유로(약 350억 원) 한도 내에서 "기업상속세 감면 모델"에 따라 상속세를 차별적으로 감면

구 분	내 용
일반감면 모델	상속재산의 85% 감면 혜택 (5년간 기업 유지, 급여지급 총액 400% 이상)
선택감면 모델	상속재산의 100% 감면 혜택 (7년간 기업 유지, 급여지급 총액 700% 이상)

- * 일반감면 모델을 선택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재산(15%) 가운데 최대 15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제

15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대규모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 ☑ '사전 특별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대상 사업재산 규모가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
- ☑ 상속인이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점감적 세감면' 혜택을 신청하거나, '세감면 필요성 심사'를 신청

1) 점감적(漸減的) 세감면 모델

-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시작하여 최고 90백만 유로(약 1,200억 원)에 이르기까지 매 75만 유로마다 1%p씩 감면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로 설계

- * 90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16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대규모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26백만 유로 초과 사업재산 규모별 상속세 감면 비율

사업재산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상속세 감면 비율 (단위 : %)	
	상속세 '일반감면'	상속세 '선택감면'
< 26.00	85	100
26.0 - 36.49	85 - 72	100 - 87
36.5 - 46.99	72 - 58	86 - 73
47.0 - 57.49	57 - 44	72 - 59
57.5 - 67.99	43 - 30	58 - 45
68.0 - 77.49	29 - 17	44 - 32
77.5 - 90.0	16 - 0	31 - 15
> 90.00	0	0

17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대규모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2) 세감면 필요성 심사

- 상속인이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50%를 투입해도
기업의 사업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상속세액에 대한 납부가 면제
- '7년간 급여지급 총액 700% 유지' 조건 적용

18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재단, 공익신탁, 회사법 등을 활용한 기업승계

☑ 가족기업의 경영 및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와 안정된 지배구조 구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재단 활성화 : 공익재단, 가족재단, 이증재단, 신탁재단
 - * 공익재단 출연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 : 20%
 - * 다수의 성공한 기업인들이 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과 기업의 영속성 유지 수단으로 활용
- 신탁제도 발달
- 주식의 의결권과 수익권 분리
- 가족경영에 유리한 유한회사 제도 활성화 등

19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가업을 이을 후계자가 없는 경우의 기업승계

☑ 창업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승계 및 양도를 지원

- Nexxt Change 프로그램 :
전국규모의 독일 최대 온라인 기업 거래소
(정부, KfW, 지역 은행, 기업인 단체 등 참여)
- 매년 1,000여 개 기업의 승계가 이 거래소를 통해 성사

20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승계 유형별 상속공제 제도 활용도 (독일 / 한국)

상속 방식을 활용한 기업승계

(단위 : 독일 1백만 유로, 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액
독일	2014	7,059	3,263	3,082	3,176	10,141	6,439	0.6
	2015	7,789	3,481	3,296	1,272	11,085	4,753	0.4
	2016	8,207	3,169	3,678	2,039	11,885	5,208	0.4
	2017	7,410	2,448	3,337	4,433	10,747	6,881	0.6
	평균	7,616	3,090	3,348	2,730	10,965	5,820	0.5
한국	2014	63	94	5	4	68	98	1.4
	2015	57	164	10	6	67	170	2.5
	2016	60	295	16	22	76	317	4.2
	2017	75	189	16	32	91	221	2.4
	평균	64	186	12	16	76	202	2.6

자료원: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이성봉 자료 재인용

21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

승계 유형별 상속공제 제도 활용도 (독일 / 한국)

증여 방식을 활용한 기업승계

(단위 : 독일 1백만 유로, 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액
독일	2014	2,367	33,864	8,487	25,722	10,854	59,586	5.5
	2015	2,552	24,584	10,369	27,444	12,921	52,028	4.0
	2016	2,429	18,255	10,733	34,775	13,162	53,030	4.0
	2017	1,850	17,939	8,722	24,123	10,572	42,062	4.0
	평균	2,300	23,661	9,578	28,016	11,877	51,677	4.4
한국	2014	73	127	33	12	106	139	1.3
	2015	52	101	24	6	76	107	1.4
	2016	96	193	34	8	130	201	1.5
	2017	116	246	57	17	173	263	1.5
	평균	84	167	37	11	121	178	1.4

자료원: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이성봉 자료 재인용

22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

☞ 기업승계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 2017년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특례사업승계세제' 청설 (2018년)

<특례사업승계세제 도입 목적>

- 경영자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산업을 다음세대에 확실하게 이전하고, 사업승계를 계기로 후계자가 경영혁신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기존 사업승계세제(일반 사업승계세제) 문제점 보완을 통한 사업승계 활성화 도모

*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중소기업 폐업이 급증하여

향후 10년간 650만개의 일자리와 약 22조 엔에 달하는 GDP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

23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

☞ '특례사업 승계세제'의 주요 내용

- 후계자가 '특례인정 승계회사'의 대표권을 갖고 있던 자(특례 증여자, 특례 피상속인)로부터 증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해당 특례인정 승계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특례증여자 또는 특례후계자 사망일 까지 납세를 유예함으로써, 승계시점에서의 세금부담을 완전 면제
- 친족 이외의 자를 포함 복수의 주주와 대표자인 후계자(최대 3인)에 대한 승계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승계방법 선택 가능
- 승계 후 의무고용 요건(5년간 평균 8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납세유예 계속 가능
- 후계자가 승계 기업을 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업 및 매각 당시 평가액을 기초로 납세액을 재계산하고, 승계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납세액과의 차액을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장래의 불안을 감소
- 2023. 3. 말까지 승계계획을 제출하고 2028. 12. 말까지 실제로 승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업실정에 적합한 승계 활동 지원
-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 10년간 한시 적용

<납세유예 지속 요건>

후계자가 세금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대표자로 재직, 납세유예 대상 주식 계속 보유

24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

일본의 사업승계 관련 세제

		원칙(일반)	특례 적용
대상 주식		총주주 등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전 주식
유예 대상 평가액	증여세	100%	100%
	상속세	80%	100%
후계자		후계경영자 1명만	후계경영자 3명까지 (소유주 10% 이상의 요건)
증여하는 자		선대경영자만 ※ 개정 후 : 복수 주주 가능	선대경영자를 포함한 복수 승계자
고용 요건		5년 평균 80% 유지	실질 철폐
경영 승계 기간 후 감면 요건		민사재생(民事再生), 회사更生(会社更生)시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재계산 하여, 초과분의 유예 세액을 면제	좌기의 경영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합병, 주식 교환 등에 의한 소멸 등 해산의 경우를 추가
상속 시 정산과세		추정 상속인 등 후계자만	추정 상속인 등 이외에도 적용 가능
특례승계 계획의 제출 및 제출 기간		불필요	필요 2018년 4월 1일부터 5년간
선대 경영자로부터의 증여 기간		제한 없음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5



4.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웨덴)

- ☑ 2000년대 초까지 OECD 국가 최고 수준(70%)의 상속세
- ☑ 다수의 기업이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 추진
- ☑ 진보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고 대책 마련
- ☑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라는 과감한 친 기업정책을 추진하여
고용 및 재정 위기를 타개

26



5.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기본방향

- ☑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전환
-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사전증여 확대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 촉진
- ☑ 기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경영권 할증평가) 폐지

27



5.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세부 추진과제 : 단기 해결과제

- ☑ 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재산가액 공제 한도를 인상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 년 매출액 기준 3,000억 → 1조 수준
 - 공제한도 : 최대 500억 → 최대 1,000억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
 - 사후관리 기간 : 10년 → 5-7년
 -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의무 (10년 평균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120%) : 근로자 수 기준 → 급여지급 총액 기준
 - 주된 업종 변경 제한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유지 → 대폭 완화(중분류 수준)
- ☑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 사전증여 활성화
 - 독일 상속세법, 일본 특례사업 승계세제 등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촉진

28



5.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세부 추진과제 : 중기 해결과제

- ☑ 기업 규모나 상속재산 규모에 관계 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활동에 공여되는 상속재산 중 일정 한도 까지는 상속세 감면 혜택 제공
- ☑ 기업승계 과정에서 위협을 받게 되는
경영권 확보와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뒷받침 할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
 - 차등의결권 등 종류주식 제도,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제, 공익신탁 활용 등
 - * 공익재단 출연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 5% → 20%
- ☑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율 최고한도 인하 : OECD 평균에 근접한 30% 수준
- ☑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상향 조정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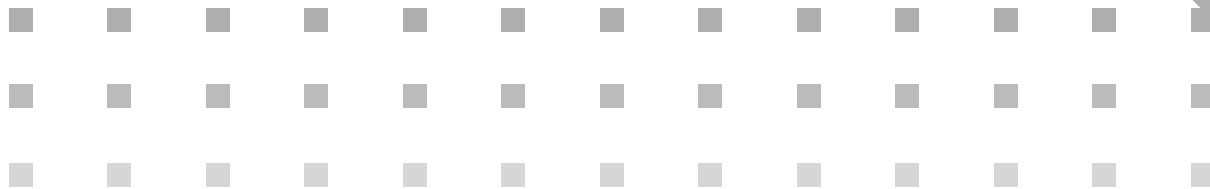
5.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기업승계와 관련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 관련 용어의 정비
 - 기업승계 → 기업승계
 - 기업상속공제 →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상속가액 공제
- ☑ 기업 부문의 역할
 -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설비투자 확대, 사람과 R&D 분야 투자 적극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적극 발휘하면서 혁신활동을 적극 전개
 -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
- + 언론의 역할

30

감사합니다.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1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오문성 교수(한양여대/조세정책학회)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임.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상속권은 인간본능에 기초하고 있고 만일 이를 제한 한다면 재산형성 동기나 근로의욕이 상실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상속세 폐지나 완화의 주장근거가 됨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 상속세의 폐지나 완화를 반대하고 있음

- 가업의 가(家)자의 폐쇄적인 의미가 가업상속공제의 가야될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듦. 업종의 변경을 힘들게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적용됨.

현행 상속세법에서 업종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이 있는 경우 관련 상속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완화하라는 요구에 입법취지인 기술과 경영 know-how 승계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본제도의 도입초기에 “기술과 경영 know-how 승계”라는 것이 있었다면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함. 지금은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함

현재시점에서는 가(家)의 의미를 집안이라는 의미보다는 기업을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의사결정권한(경영권)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함.

- 효율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대주주는 경제학적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더 나은 대주주에게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효용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

가업상속대상자산 vs 일반자산

가업상속대상자산은 상속대상자산이면서 동시에 사업의 영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용이나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산/일반자산은 상속대상자산

- 가업상속공제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집안사람들의 가업영속 그 자체가 아니라 경영을 잘 해오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상속이라는 과정이 경영권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경영권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조직에 속한 피고용인 등의 안녕(安寧)을 저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구체적인 방법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를 고려하여 단기, 장기 대책을 생각해 볼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첫째,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의 규모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지만 대기업의 경우도 예외를 둘 필요는 없음. 가업상속공제의 기본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지분증권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경영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임.

둘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에서 문제점은 경영권의 징표로 대표이사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임.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므로 대표이사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경직화된 규정임.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대표이사요건은 이사직을 전제로 한 최대주주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임.

셋째,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를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음.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함.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는 것도 완화할 필요 있음. 기업의 업종변경도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자구책임. 업종변경은 그 법인의 고유의 경영의사결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기업이 존속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함.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요건을 고용인원수로 규정하는 것도 각 개별기업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탄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못함. 고용인원수보다 인건비총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것도 각 사업연도 고용조건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누적 고용유지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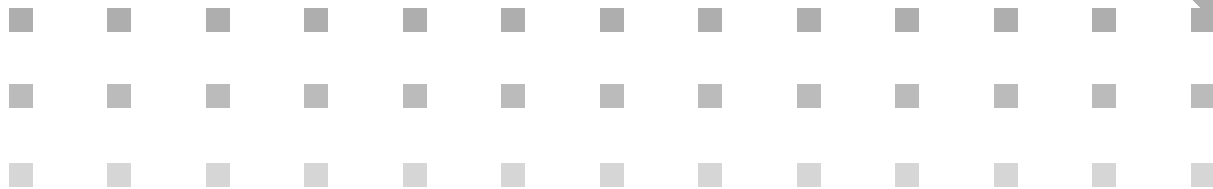
- 하지만 단기적 개선방안은 현재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 것에 불과함.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의 장기적 개선방향은 가업상속공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수혜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크지 않고 실무적으로 상속인요건, 피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설사 혜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쉽게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반면 비수혜자는 가업상속대상재산도 상속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 데 이중 일부분을 가업상속공제 해주는 것은 납세자간 공평성을 침해하여 가업상속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함.

가업상속공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가업상속공제대상재산에 대하여 과세이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임.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2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 한국의 장수기업 현황¹⁾<기업규모별 장수기업²⁾>

(단위 : 개, 년, %)

	장수기업				비장수기업				전체			
	개수	업력	규모별	규모내	개수	업력	규모별	규모내	개수	업력	규모별	규모내
중소	1,314	56.1	80.7	0.19	696,001	11.1	99.3	99.81	697,315	11.2	99.3	100.00
대기업	315	60.3	19.3	6.23	4,742	18.5	0.7	93.77	5,057	21.1	0.7	100.00
전체	1,629	56.9	100.0	0.23	700,743	11.2	100.0	97.77	702,372	11.3	100.0	100.00

자료: 필자작성,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8

- 장수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8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56.1년임
- 중소기업 전체 대비 0.2% 수준을 구성하고 있음

□ 장수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0.2세, 비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54.2세로 나타나 장수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비장수기업에 비하여 평균 6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수기업의 대표자가 70세 이상인 기업이 18.0%, 비장수기업이 5.8%로 장수기업이 3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장수기업의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경우는 49%로써 비장수기업 26%에 비하여 거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나, 장수기업은 향후 안정적인 승계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 토론자 작성,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8 참조

2) 한국의 경제발전 성숙도 및 기업의 업력 분포를 참고하여 장수기업을 업력 만 50년인 기업으로 정의

<장수기업 · 비장수기업 대표자 연령>

대표자연령	장수기업		비장수기업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30대 미만	0	0.0	446	0.4
30대	13	1.8	5,140	5.0
40대	95	12.9	26,708	26.0
50대	267	36.3	43,558	42.3
60대	228	31.0	21,082	20.5
70대 이상	132	18.0	5,932	5.8
합계	735	100.0	102,866	100.0
평균연령	735	60.2	102,866	54.2

자료: 필자작성,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8

- 일본에는 창업 100년 이상 되는 전통 기업이 3만 3,069개사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회 조사 (2012년 8월)보다 20.5%(5,628 개사) 증가³⁾

<일본의 장수기업>

일본 장수기업 산업 및 종사자수 분포			
산업별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제조업	26.4	4명 이하	33.8
소매업	23.1	5인 이상 10인 미만	20.3
도매업	21.6	10 이상 20인 미만	15.7
서비스업	11.4	300인 이상	3.3
기타	17.5	기타	26.9
합계	100.0	합계	100.0

자료: 필자작성,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8

기초자료: 全國「老舗企業」調査, 東京商工リサーチ, 2016

3) 全國「老舗企業」調査, 東京商工リサーチ, 2016.12. 본 조사는 도쿄 상공 리서치가 보유한 기업 데이터 약 309 만개에서 창업 연도 1917년 이전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출 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창업 100년 이상을 '전통 기업(장수기업)'이라고 정의하였음

□ 가업승계지원 세제 및 효과

○ 가업상속 관련 상속·증여세 감면

- 한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의 안정화 및 고용의 안정화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최근 수년간 세제를 승계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왔음
- 장수 기업을 지원하는 세제 지원의 주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 부문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500억)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이 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감면 규모를 점차 확대하거나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장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란 상증세법에서 자연인(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상당액을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가업승계 상속과세 현황

<가업상속공제 규모>

(단위 : 건수,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41	37	46	35	46	60	63	57	60	75
공제금액	3,217	8,356	36,487	30,091	30,707	86,694	94,405	164,454	295,420	189,667
평균	78	226	793	860	668	1,445	1,498	2,885	4,924	2,529

자료: 필자작성,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8

< 창업자금 및 가업상속 증여세 특례 감면 규모 >

(단위 : 건수, 백만원)

	창업자금			가업승계 증여		
	건수	증여재산가액	평균	건수	증여재산가액	평균
2014	11	10,351	941	73	127,315	1,744
2015	3	1,697	566	52	101,227	1,947
2016	11	10,245	931	96	193,391	2,014
2017	13	10,754	827	116	246,309	2,123

자료: 필자작성,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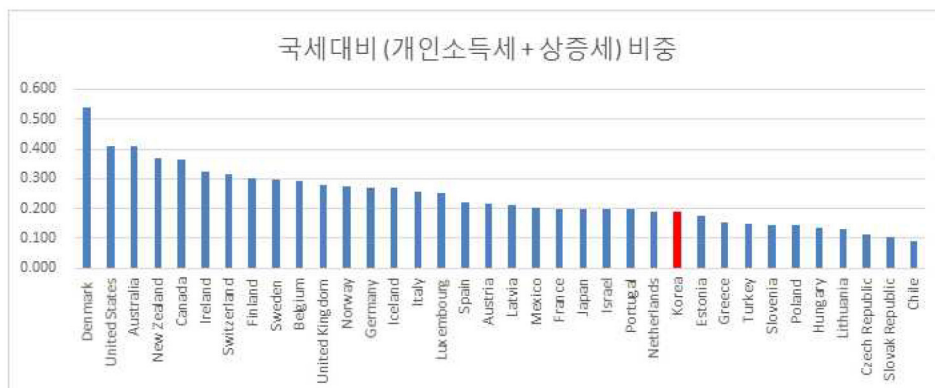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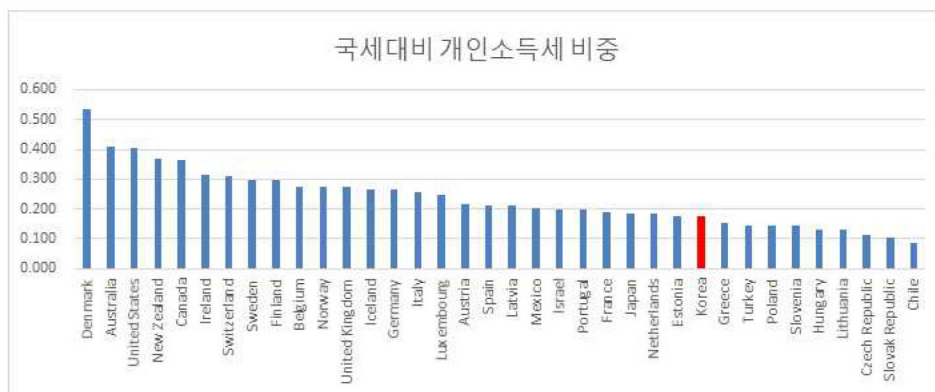
□ 시사점

- 가업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기반을 구축
 -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상속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생전의 계획적인 증여로 가업을 승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
 - 소규모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여 소규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 일본 장수기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앞으로 낮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도 큰 시사점이 될 것임
 - 또한 고용도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에서 신규 창출되는 부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확충은 한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이슈임

□ OECD 국가 국세대비 상증세 · 개인소득세 비중



신상철 작성, 중소기업연구원(이하 동일)
기초자료 : Revenue Statistic 2018, OECD



□ 최근 5년간 상속세 세수 규모

(단위 : 명, 백만원)

	상속세			증여세		
	납세인원	세수실적	평균	납세인원	세수실적	평균
2013년	6,275	1,586,535	253	109,644	2,703,224	25
2014년	7,542	1,696,147	225	105,533	2,929,099	28
2015년	6,592	1,943,658	295	101,136	3,099,952	31
2016년	7,393	1,994,918	270	124,876	3,355,142	27
2017년	6,986	2,341,875	335	146,337	4,443,276	30
합계	34,788	9,563,133	275	587,526	16,530,693	28

기초자료 : 국세통계연보

□ 2017년 상속세 결정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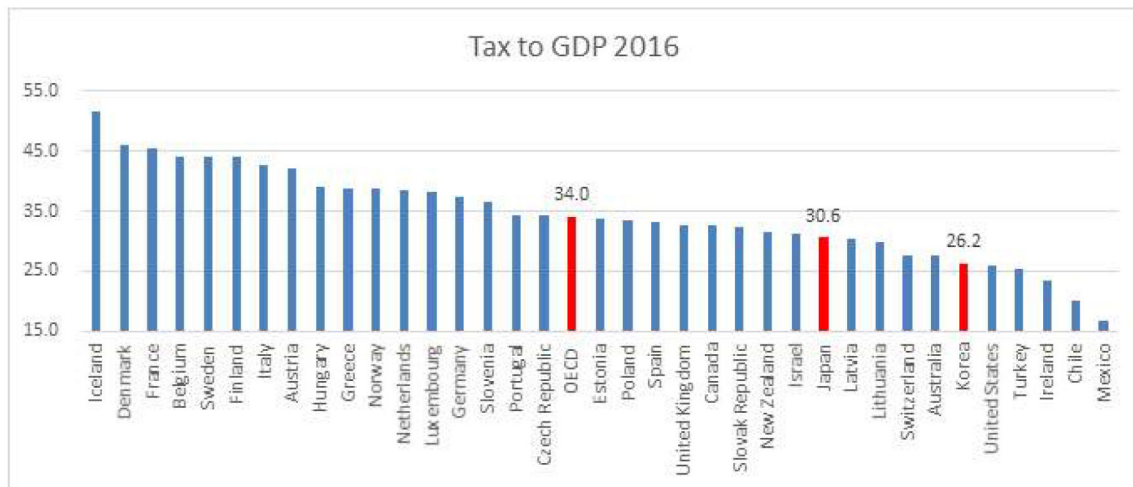
상속세 결정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피상속인수	피상속인수 누적비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누적비율*	산출세액 평균
1억 이하	1,392	19.9	7,008	0.2	5
3억 이하	1,730	44.7	44,457	1.6	26
5억 이하	1,040	59.6	68,091	3.7	65
10억 이하	1,238	77.3	187,753	9.5	152
20억 이하	890	90.0	348,385	20.3	391
30억 이하	283	94.1	229,038	27.4	809
50억 이하	200	97.0	289,600	36.3	1,448
100억 이하	118	98.6	344,454	47.0	2,919
500억 이하	86	99.9	829,574	72.7	9,646
500억 초과	9	100.0	883,708	100.0	98,190

기초자료 : 국세통계연보

* 산출세액 합계가 계산과정에 의하여 일치하지 않아 규모별 산출세액합계를 재산출하여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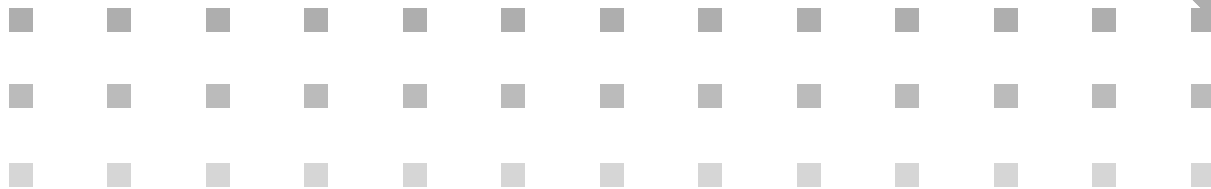
○ 최고세율 비중 : 5.9%(413명)

□ 2016 OECD 국가 조세부담률



신상철 작성, 중소기업연구원(이하 동일)
 기초자료 : Revenue Statistic 2018, OECD

감사합니다.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3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박 훈 재정세제위원장(경실련)

1. 본 발표문의 의미

- “잘 준비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는 양질의 일자리 보존 및 창출, 투자 확대, 경영 비법과 기술 이전에 기여하고 명문 장수기업으로 가는 관문”이 해당 발표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임
- 단기 해결과제로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할증평가 폐지”와 장기 해결과제로서 i) 기업 규모나 상속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 활동에 공여되는 상속재산 중 일정 한도 까지는 상속재산 공제 혜택 제공 ii) 차등의결권 등 종류주식 도입, 공익재단 출연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현행 5% → 20% 수준으로 확대) 등, iii)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율 최고한도를 OECD 평균에 근접한 30% 수준으로 인하 등은 상속세, 증여세 관련 큰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여러 고민 끝에 나온 주장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법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딪쳐서 해결해야 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함
- 경실련에서는 경제정의, 조세정의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로서, 반기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정의를 위해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점을 함께 고민하지만 토론자료에서 그 실천방법 및 생각의 기저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밝히는 바임.

2. 발표자가 지적하신 “기업의 승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인가?”에 대한 가업승계에 관한 인식의 문제 지적에 대하여

- 실제로 기업의 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음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에는 상속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기업유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기업승계,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관련한 주요 세법상 개정 논의사항은 아래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그 적용기업을 늘릴 것인지,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이후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박훈·채현석·허원,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5., p.341에서도 “추가 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공제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생략)

- 위 가업상속공제는 추가상속공제의 하나로서 그 혜택이 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는 점에서 그 대상 확대시 부의 대물림시 세제상 혜택 확대로 비춰지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경실련에서는 종전 가업상속공제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기업유지에 따른 부의 대물림 이외의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 폐를 주장하기 보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한 바 있음
- 발표자가 주장하시는 “기업승계는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종
업원, 거래처, 기업소유 가족 등)와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에 대해 상속인 이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찬성하지만 이들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상속세 감면 등에
따른 사실상 조세지출에 대한 반발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 점이 본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국가가 상속세로 세금을 상속세 걷어가서 세수입을 확보하는 것
보다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이연함으로써 가져오는 경제적 성과가 크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될 필요가 있음.
- 경실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기업이 유지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부의 대물림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유지의 성과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기업유지의 성과는 기업의 법인세 및 기업종사자의 소득세 등
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임.

3. 단기해결과제(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할증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

-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유지를 전제로 상속인에게 과세상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것임
-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기업상속공제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업이라는 범주에 벗어나 좀
더 넓고 많은 적용대상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상 확대
라는 비판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제도적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비교하여 무엇인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정서
는 기업간 합리적 차별, 합리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확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상속세를 내거나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비교로 간다면 상속세에 대한 감면이나 완화는 쉽지 않은 논쟁 속으로 들어갈 뿐 합
리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세제개편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서상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세제는 논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가 있음.
- 상속방식을 활용한 기업승계 현황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2014~2017년 4년 평균
7,616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64건이라고 발표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음. 해당 제도의 활
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찬성함.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

여가 된다면 제도적 변화를 통해 활성화를 해 볼 수 있을 것임. 최근 사후관리요건 완화부분을 위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의 것이라 할 수 있음. 일단 제도 도입을 해 놓고 그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요건을 풀어놓는 방식으로 진행은 반대하지만, 도입된 제도를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하는 사후관리요건 완화 부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기업을 유지하려는데 실제 지금 당장의 세금부담, 유지하기 어려운 사후관리요건 등은 현실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업유지를 전제로 한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세제혜택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임

- 주식 할증평가제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는 있지만, 일률적인 할증률은 이론적 실무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임.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주식 시가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주식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과세상 대응이 있다면 현재 형태의 주식 할증평가는 변화 필요는 긍정적이라 할 것임.

4. 장기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 발표자가 지적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고한도를 OECD 평균에 근접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은 근본적으로 세제의 전체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OECD 평균을 논의하면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어, OECD 평균으로 제도 개선을 할지는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재정지출과 관련한 정부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이고,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를 할지 여부, 어느 세제를 늘리거나 줄일 것인지 전체 틀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 할 것임
- 더욱이 상속세, 증여세는 세수확보이외에 부의 재분배, 출발의 평등이라는 목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세목에 대한 현 시점의 감세논의는 현실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
- 참고로 상속세법 도입당시 제정이유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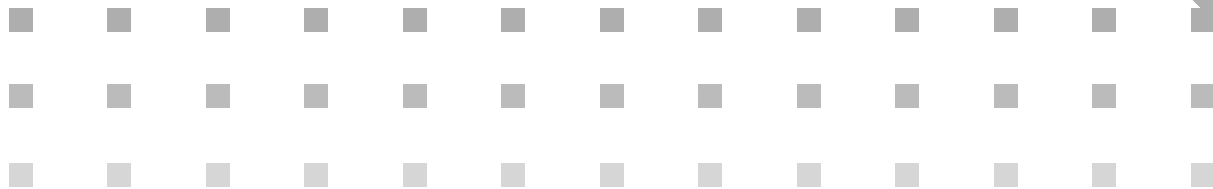
상속세법[시행 1950. 3. 22.] [법률 제114호, 1950. 3. 22., 제정]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임.”(<http://www.law.go.kr> 참조)

-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증여세제 변화의 필요성은 동의함. 다만 증여세는 사전에 조세전략이 가능하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난이 상속세 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승계 관련 증여세 세제혜택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근본적으로는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상속세 세율, 증여세 세율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세제운영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5. 마치며

- 본 발표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함
- 시민단체에서 기업의 입장을 들으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점이 어디에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세제를 만들어 가는 한 방법으로 생각됨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4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김용민 대표(진금융조세연구원)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라는 경제적 손실을 간과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임
 -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2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 세율은 65%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보다 높음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한도(매출액 3,000억원 이하), 피상속인 요건(10년 이상 기업경영 등) 외에 엄격한 사후관리요건(10년간 정규직 근로자 100% 유지 등)으로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
 - 중소·중견기업의 사전 가업승계를 위해 100억원 이내에서 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일반 누진세율(10~50%)이 아닌 10% 또는 2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향후 상속 시 합산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으나, 과세특례 한도도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저조
 - 우리경제의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선진외국과는 달리 공익재단도 5% 지분한도 등에 걸려 활용이 불가
- 이제는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과세형평만 좇다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2017년 기준 상속세액은 2.3조원, 증여세액은 4.4조원으로, 전체 국세 265.4조원 중 2.6%(상속세 0.9%, 증여세는 1.7%)를 차지
 - 2017년 소득세액은 75.1조원, 법인세액은 67.1조원, 부가가치세액은 59.2조원, 합계 201.4조원으로 전체 국세 265.4조원의 75.9%를 차지
 - 상속세 완화로 기업승계가 원활화되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증가(예: 10% 증가시 전체 국세 7.6% 증가)되어 상속·증여세의 감소분을 훨씬 상회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 ②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더욱 높게 만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③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
- ④ 사전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으나, 과세특례 한도도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저조
- ⑤ 규제 일변도의 공익재단 규정으로 사회공헌을 통한 상속이 거의 불가능

(1) 상속세율 인하

OECD국가의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상속세율>소득세율 : 7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 1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 14개국	상속세 폐지 또는 미시행 : 13개국
일본(55%)>45%) 한국 (50%)>42%) 스위스(42%)>11.5%) 미국(40%)>37%) 덴마크(36.25%)>23.08%) 스페인(34%)>22.5%) 헝가리(18%)>15%)	프랑스 (45%=45%)	상속세율 10% 초과 : 8개국	캐나다 (‘71년) 호주 (‘79년) 이스라엘(‘81년) 뉴질랜드(‘92년) 포르투갈(‘04년) 슬로바키아(‘04년) 멕시코(‘05년) 스웨덴(‘05년) 오스트리아(‘08년) 체코(‘14년) 노르웨이(‘14년) 에스토니아(미시행) 라트비아(미시행)
		영국(40%<45%), 아일랜드(33%<40%), 벨기에(30%<50%), 독일 (30%<45%), 칠레(25%<40%), 네덜란드(20%<52%), 핀란드(19%<31.8%), 슬로베니아(14%<50%)	
		상속세율 10% 이하 : 6개국 그리스(10%<45%), 터키(10%<35%), 아이슬란드(10%<31.8%), 폴란드(7%<32%), 룩셈부르크(5%<40%), 이탈리아(4%<43%)	

* 자료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9. (2018.7.5. OECD에 가입한 리투아니아는 미포함)

■ OECD 35개국(리투아니아 미포함)의 상속세율 현황을 보면

-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

식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오히려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은 폐지 또는 미도입

-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국가는 독일, 영국 등 14개국
-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형평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1개국
-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일본, 한국 등 7개국에 불과

■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현행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

- 1단계 :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로 인하(프랑스 방식)
- 2단계 :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수준(OECD 평균 상속세율 26% 감안)으로 인하(독일 방식)

(2)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음

- 미국은 개별사안별로 할증·할인을 하며, 영국은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인이 가능하나 할인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은 순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주식 가치라고 보며,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10% 할인 평가
- 일본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지배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유사상장회사 주가 등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액주주 주식은 지배주주 주식에 비해 할인 평가

■ 현행 할증평가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OECD국가중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

⇒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3)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건수(2014~2017년)는 독일이 연간 평균 10,965건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76건에 불과하여 제도 이용이 극히 저조
 -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가 저조한 이유는 가업상속공제요건(가업·피상속인·상속인·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 기인하며, 특히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 100% 유지·업종 변경 제한 등의 사후관리요건이 대표적인 애로불만 사항임
- 현재 가업상속공제에 관련된 많은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의 유지·창출이라는 목적보다는 ‘가업상속공제’라는 단어의 협소한 의미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
 - 기업이 계속 일자리 및 소득을 유지·창출토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라는 용어를 ‘기업상속공제’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대표적인 다음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¹⁾

① 가업요건

현행	개선
- 현재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규정	-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이유〉 -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의 사다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 폐지

② 공제한도

현행	개선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 모든 사업용 자산(공제한도 폐지)

〈이유〉 - 2014년부터 가업상속공제에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이연과세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므로 굳이 공제한도를 둘 필요가 없음

1) 전규안, 기업승계세제 개편방안, 2018. 참고

③ 피상속인 요건

현행	개선
- 현재 비상장기업은 지분율 50% 이상, 상장기업은 지분율 30% 이상	- 지분율 기준을 완화 (예 :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20%)

〈이유〉 최대주주로서 현행 지분율 기준에는 미달하나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저지분율 완화 필요

④ 상속인 요건

현행	개선
- 현재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만 기업상속공제 적용	- 전문경영자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소유권만 승계하여도 상속이 가능하도록 변경

〈이유〉 기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일자리 및 소득을 계속 유지·창출하는데 있으므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활용할 수 있으면 상속인이 굳이 경영권까지 모두 승계할 필요는 없음

⑤ 사후관리요건

1) 고용유지 요건

현행	개선
- 현재 각 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80% 이상,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고용유지 요건 완화 : '근로자의 수' 요건과 '총 급여' 요건 중 선택 허용

〈이유〉 상속 후 매출감소나 이익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고용유지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유예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가장 큰 애로사항임.

* 독일의 경우 85% 공제시 5년간 급여 400% 유지, 100% 공제시 7년간 급여 700% 유지를 요건으로 함

2) 주된 업종 변경 제한

현행	개선
- 기업의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벗어나면 상속세를 추징하여,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 곤란 (예 : 제조업 기업이 도소매업 진출)	- 가업상속 배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

〈이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

3) 사후관리기간

현행	개선
- 현재 10년	- 7년으로 단축

〈이유〉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 단축
 * 독일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85% 공제시 5년, 100% 공제시 7년.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등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의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법인기업만 적용)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세율로 증여세 납부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사실상 과세 유예제도)
 - 사후관리기간: 7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과세특례 한도가 낮고, 향후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정산되므로 절세 혜택이 크지 않으며, 사후관리요건(특히 업종변경 제한)이 까다로워 그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

① 과세특례 한도

현행	개선
- 현재 100억원	- 기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이유〉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생전의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기업상속공제 한도와 다르게 할 이유가 없음

② 주된 업종 변경 제한

현행	개선
- 기업의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벗어나면 증여세를 추징하여,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 곤란	- 기업상속 배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

〈이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

(5) 공익법인 제도개선

■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함

- 창업자와 2세대 경영인들의 퇴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는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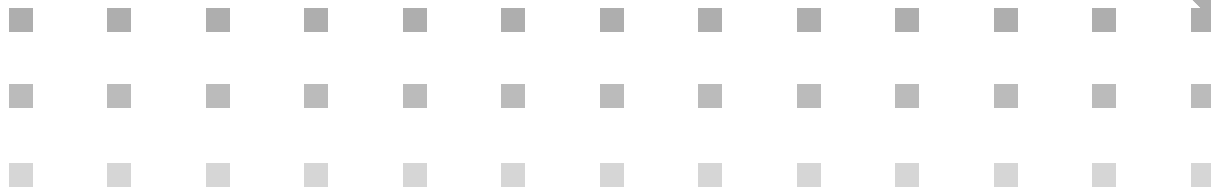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나,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용 발생

- 주요 선진국의 사례(포드재단, 록펠러재단, 스웨덴 발렌베리재단 등)를 참고하여, 재단 등을 통한 공익기여 및 통제방식으로 대기업의 상속 세제 합리화 방안 강구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5%이내의 주식 출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비과세되어, 기업들의 기부를 통한 공익활동이나 기업승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에는 20%, 일본의 경우에는 50%까지의 주식 출연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하여 기부 활성화 및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공익법인 출연주식 상속세 비과세 한도를 20%로 상향조정하여, 기부 활성화 및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필요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5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1. 상속세의 문제점

1.1. 헌법적 문제점

- 상속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에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호됨.
- 조세의 부과징수도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헌재 결정).
-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받는 금액을 감소시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효과를 감소시킴.
- 상속세율이 높아질수록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커짐.
-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 최고 50%(지배주주의 주식에 대한 30% 할증 시 65%)

1.2. 경제학적 문제점

- 조세의 부과는 민간부문의 재화용역의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음(초과부담). 조세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조세의 중립성).
- 상속세는 중립적이지 못하므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장기투자를 왜곡할 수 있음. 자녀가 상속세의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분을 매각하는 등으로 경영권 지분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그 결실이 자신이나 자녀에게 귀속될 것인지가 불확실한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기업이 장기 계획에 따라 경영되지 못한 채 그 경영권이 증도에 매각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그 매각상대방은 주로 사모펀드, 기존 대기업, 외국자본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2. 기업상속공제의 기능과 필요성

- 상속세로 인한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정상화하고, 원상회복시킴
- 소수의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음(경제권력의 분산)
 - 왜 미국은 Apple 공화국이 아닌가? / 기존 재벌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의 육성
- 장기적 관점의 기업경영과 투자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음 : 한국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데, 일본의 청년들은 대학재학 중에 이미 대기업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고 입도선매됨.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 조세는 사회를 운영하는 유일한 원리가 아니고,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제도 중의 하나에 불과함. 조세의 원리에 충실한 것만으로 국가의 성장과 번영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국가를 구성하는 다른 원리나 제도들과의 조화와 절충을 할 필요가 있음.
 - 조세공평주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기반을 둔 것인데, 헌법상 평등원칙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함.

- 가업상속공제 또는 그 대상의 확대가 소수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인지
 - 규제 또는 수혜의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하다거나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가업상속공제대상의 확대에 따른 혜택을 받는 법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야말로 기존 재벌기업을 견제하여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역학관계를 균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임. 따라서 그 기업들에 대한 혜택의 부여는 충분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진 것임.

-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하므로, 가업상속공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거나 효율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기업이 속한 국가의 개별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름.
 - 미국과 같이 ① 전문경영인의 임기가 길고, ② 스톡옵션 등을 통하여 막대한 보상이 주어지며, ③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사업부의 폐지 등 경영혁신의 실행이 용이함), ④ 전문경영인을 통제할 수 있는 증권시장 등이 잘 발달해있는 국가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음.
 -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반드시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가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소유가 분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경우에도 지배주주의 지분이 승계, 유지되어 전문경영인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스웨덴의 발렌베리).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